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月刊] 第104號

THE FISHING PORT NEWS

발행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인쇄인 ISSN 1227-7053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5595~6
 FAX. 568-6653

水產·海運·港灣 연계 發展

一流 해양국가 발돋움 위한 한중 밀알도

辛相佑 초대 해양수산부장관 就任式서 강조

희망을 느끼고 있다. 소감을 밝히고『해양수산부는 우선 21세기 해양시대를 앞두고 해양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양개척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어『해양수산부는 수산업에서부터 항만건설과 해운산업을 연계해 발전시키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산양식업,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주역이 돼야한다. 면서 이를위해 전 직원들이 소관분야의 전문가가 돼 일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한중의 밀알이 되자고 역설했다.

신 장관은 특히『앞으로 부처 이기주의 내지 분파에 대한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면서 직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체감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이와 함께『공개 행정과 다수의 이익을 찾아 봉사하고 규제를 보다 더 완화하는 등 모범적인 부처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상우 초대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론계 출신



辛相佑 海洋水產部 長官

의 7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 정보, 보사위원장을 역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해양수산부의 정식 출범은 수산인들에게 적잖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수산업 부문만 국한해서 말한다면 단연코 수산행정의 활성화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동안의 수산 행정은 적잖은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업무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부처가 없었고, 독립된 수산청이었던 까닭에서였는지는

주외에서 벗어나 일과 능력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할 것이다.

무언가 수산인들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는 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 경주되어야만 신뢰받는 수산해양행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나무의 줄기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주변의 거주장스러운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海洋水產部 출범을 계기로 살펴 본 水產界 어제와 오늘

偏狹·노쇠 罷取히 탈피

몰라도 전반적으로 수산업 업무가 폐쇄적이고, 퇴행적이었으며 또한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소외감 때문이었는지 매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함으로써 수산행정의 노쇠화와 자폐화를 자초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수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결국 수많은 어업인이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불행한 사태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한마디로 수산행정에 자극이 필요했다. 힘없는 수산인이나 산하단체에 군림이나 하려는 그러한 정신자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는 수산행정 활성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

해양수산부 발족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부연하자면 수산행정의 활성화를 최고, 최대의 화두(話頭)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자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지난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자기 성찰을 새롭게 다진 다음 내일을 바라보자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업무는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식의 작고 편협된 것이 아닌 보다 선이 굵고 진취적이며, 거시적인 범정부적 차원의 창의적인 수산 해양분야 정책개발에 보다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하루속히 패배

준다면 무성한 나뭇잎과 과실은 저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시콜콜 산하단체를 간섭하면서 들키는 커녕 방해만 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결단코 이제는 삼가야 할 것이다.

기왕에 선이 굵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사소한 집행적 업무는 과감히 산하단체나 하부 기관에 이양, 분산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다 쟁길 수 있겠는가. 현대 행정실무는 업무분담을 통한 전문화 세분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왕에 이양, 이관된 업무는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면 수산해양업무의 새기를 마련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굳이 사족을 단다면 해양수산부의 약점을 해양부로 쓰고 있는 것은 타부처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다. 꼭 부처이기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해양과 수산의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業界 활성화 위해 团體育成 敗北의식 벗고 實力を培養 자칫 放心하단 水產위축 憂慮

2004년까지 8千3百50億원

國會業務報告

漁港 확충 시설 투자計劃

8월 20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국회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수산부문 중장기 투자계획에서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어항시설 확충에 8천3백50억원, 어촌개발 및 지원에 4천9백98억원, 어촌 종합개발에 4천5백36억원, 가공산업 육성에 2천5백만원, 수산자원조성에 2천2백52만원, 수산기술개발에 1천6백90억원, 어로시설현대화에 1천5백49억원, 원양어업 육성에 1천4백44억원, 양식 어장개발에 9백5억원 등 수산분야에 총 3조3천6백26원을 투자, 신해양질서에 대처하고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산물 수요증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조성 및 해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업구조 조정과 어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어촌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추진중인 부산가덕신항, 인천북항, 새만금신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보령신항 등 7개 신항만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올해 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 신항만건설사업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7개 신항만건설에는 재정·4조7천99억원, 민자 7조8천4백92억원 등 모두 12조5천5백91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연내에 부산가덕신항과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포항영일만신항 등 4개항에 대해 민자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위해 현금차관 도입허용, 법인세 인하 등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자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지난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자기 성찰을 새롭게 다진 다음 내일을 바라보자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업무는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식의 작고 편협된 것이 아닌 보다 선이 굵고 진취적이며, 거시적인 범정부적 차원의 창의적인 수산 해양분야 정책개발에 보다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하루속히 패배

해수부라고 하든지, 그게 이상하게 들리면 차라리 해양수산부 전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듯 싶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을 다시한번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고전적 명언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浮遊·沈澱物수거 큰 成果

「漁港協」청소선 닷새동안 13개港서 48톤

한국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안흥항, 서거차항 등 13개항에서 부유물, 침전물 등 48톤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로부터 4척을 추가 인수, 총 7척의 어항청소선을 전국해안 7개소에 고루 분산시킨 후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한 결과, 운항거리가 단축되고 현지 상황파악이 용이해 청소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안전운항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3개 항에서 실시한 어항청소선별



청소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항901호: 5천3백80kg
(군산항, 안흥항) △어항902호: 7천kg (서거차항) △어항903호: 2천5백kg (득암항, 청산도항) △어항904호: 3천5백

kg (안도항, 미조항) △어항905호: 1천3백50kg (지세포항, 능포항) △어항906호: 1만kg (정자항, 읍천항) △어항907호: 1만8천2백kg (대진항, 거진항)

新港灣건설促進法안 自治단체 許可 배제

9月 定期국회 上程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원활한 항만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도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안(가칭)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개발할 때 항로 방파제 하역장비 등 직접항만시설 외에 배후 교통시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을 자자체의 승인 허가 면허 심의 등의 절차없이 개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항만은 항만법에 의거해 개발해 왔으나 화물터미널 등 관련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자자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아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설키로한 부산가덕신항, 인천북항, 군산새만금항, 목포신외항, 물산신항, 보령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등 7개 신항만건설에 촉진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국

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설치나 토지형질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만고시구역 내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없이 도로를 자체적으로 계획해 건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도 매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등에 의거해 건축물의 신증축을 관掌하는 자자체의 승인없이 복합터미널 등 각종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建設경업 免許費用덜어 申告의제처리 制定키로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면허(또는 등록)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상호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나머지 면허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신고의제처리가 시

행될 경우 건설관련 업체들의 면허관리 비용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환경설비업 등 각종 건설 유관 면허와 등록의 관리가

일원화될 것으로 보고 건설 업자에 대한 이같은 신고의 무사항을 의제처리토록하는 내용을 앞으로 제정될 기본 법안에 담기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는 면허를 관리하는 한 기관에 한 번만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그 신고기관에서는 나머지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신고의무는 끝나게 된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제도 아래서는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건설업체가 대표자를 비롯한 상호, 영업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각 면허나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 각각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林昌烈 해양수산부 次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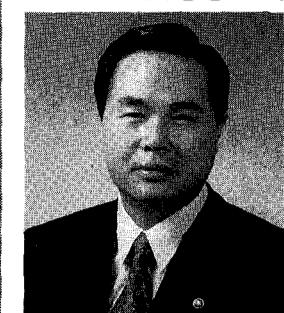
조달청장·科技處차관등 歷任

받았다.

◇신임 임창열 차관 프로필

△43년 서울 출생 △69년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사무관 △재무부 국제금융과, 금융정책과, 이재2과장 △대통령 경제비서실 파견 △재무부 재정금융심의관실 △재무부 관재무관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이재국장 △IMF 교체이사 파견 △IBRD이사 파견

△재무부 증권국장 △국회 재무위 전문위원 △재무부 제2차관보 △조달청장 △과학기술처 차관



정부는 지난 8월 9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창열 과학기술처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임창열 차관은 서울출신으로 서울고, 서울상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미 윌리암스컬리지에서 개발경제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개인회원 등 1천8백회원이 등록하여 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 원문제공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外國5個감리사登錄

건설감리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외국업체는 5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감리원으로 보유등록한 외국인 기술자는 모두 2백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형건설 공사의 책임감리를 둘러싸고 국내업체간은 물론 외국업체와의 수주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건설감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내에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외국업체는 프랑스의 SEEE사 등 2개사, 독일의 드 컨설트사 등 2개사, 일본의 조오다이사 등 모두 5개 업체이다.

이와관련 감리업계 관계자는 외국감리사와 외국인감리원 등록으로 이들의 활용도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경영합리화와 기술력향상, 소속감리원의 철저한 업무자세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水振院 적조研究部등 신설

水產職制 대체로 存續

정부는 신설 해양수산부의 직제를 2실6국36과12담당관의 본부와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확정했다.

직제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기능에 해양환경보전과 심해저 자원개발 등을 함께 갖도록 했으며, 정원은 본부에 5백63명, 소속기관에 3천9백3명, 해양경찰청에 4천4백71명 등 총8천9백37명을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본부가 종전보다 75명 감소, 소

속기관은 1백12명 증가, 해양경찰청은 33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산분야는 국립수산진흥원이 적조연구부 등의 신설로 1백12명이 늘어났으며,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된 전 수산공무원교육원도 6명이 늘어났다.

한편 수산물검사소, 지도선사무소, 어항사무소 등은 종전의 인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建設기술 情報PC 보급

建設技術研究院

건설기술연구원은 올해 각종 건설기술정보를 PC를 통해 일반사용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연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기술자료 20만건, 해외건설기술자료 3백 여만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중통신망을 통해 일반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금년에는 PC를 통해서

도 이들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연은 정보내용도 확충, 일본과 미국에서 발행된 93, 94년 건설정보를 번역하여 보급하고 자재정보는 올해 1천5백개 생산업체, 6천여개의 카탈로그 정보를 CD 타이틀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연의 정보보급은 회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문 및 종합건설업체,

先進東亞技術報國

주요사업영역

국토개발부문

도시계획, 조경, 교통, 에너지사용계획, 측량

건설사업부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건축구조,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발송배진

종합책임감리사업부문

토목책임감리, 건축책임감리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株)東亞技術公社

대표이사 김영삼

DONG-A ENGINEERING Co.,Ltd.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자리 291-3 전화(0612)374-1320



간 염

칼로리 높은 식사가 도움
특효약 선전에 속지 않도록

간은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을 맡는 중요한 장기이다. 이번엔 이중요한 장기인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간염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B형 바이러스 간염 외에도 여러 바이러스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알콜성간염, 독성간염, 약물 유발성간염이 있을 수 있다. 그중 B형간염을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알콜성이나 약물유발성간염은 바이러스간염에 비하면 그 발생률이 적으며 바이러스 간염 중에도 B형간염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형간염은 그빈도 뿐만 아니라 후에 간경변나 간암으로 진행되는데 주요 관련 요인이다.

실제로 A형간염의 경우 주로 소아에서 특별한 증세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앓고 지나가며 그후는 A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겨 A형간염에 다시 걸리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30대 이상에서 A형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시 1백%가 검출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20대이하에서 A형간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게 되며 30대이상의 성인에서는 문제가 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바이러스간염(NANB : non A non B)의 경우 아직 확실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5~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간염이 걸리게 된 경우 모든 환자에서 황달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피로감, 오심, 미열 등 비특이적 증세들로 시

작되어 환자들은 보통 시작단계에서는 모르고 지낸다. 소변에 빌리루빈의 배설이 증가되어 소변색깔이 암갈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때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도 한다. 이후 황달이 생김과 동시에 다른 증세등이 소실되며 소양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증세들로 병원을 찾으면 간기능 검사 및 바이러스항원, 항체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간염의 경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토등의 증세로 음식물 섭취가 어렵거나 진단이 불명확하여 여러 검가 필요한 경우, 병이 심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입원을 요한다.

간염의 치료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약물들은 없는 상태이기에 일반적 원칙들이 중요하다. 즉 황달 미열 등의 증세가 있는 시기에는 육체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된다. 칼로리가 높고 조화있는 식사를 한다면 굳이 비싼 영양제 등의 필요성을 없다. 대개 식욕이 없고 오심 구토 등이 있기 쉬우므로 식사는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먹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중에는 간염에 대한 특효약인 양 마구시판되는 무수한 약들이 있다. 이러한 약들이 단순히 간염을 못고치는 무능(?)의 범위를 벗어나 간에 극심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간은 대사에 관계되는 장기이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계류시설은 계류시 유어선 등의 길이 방향과 항풍방향이 일치하도록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기계, 기구이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국토 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당해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 要領

(82)

피셔리너의 計劃

배치하는 것이 안전상 바람직하다.

2.4.5 상가시설

피셔리너에 있어서 육상보관정을 박지와 육상보관시설과의 사이에서 양강 이동하는 기계설비를 상가시설이라 말한다.

상가시설의 형식은 리프트식, 크레인식 등이 있고 각각 특성이 있으므로 그 형식과 규모는 종류, 형식, 수, 처리능력, 육상보관형식 등에 따라 적의 설정할 필요가 있다.

2.4.6 육상보관시설

육상보관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대상으로 하는 주정의 종류와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셔리너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육상보관시설은 보트야드(육외평면보관)이다.

시설로서는 포장 및 배수시설 등으로 비교적 건설비가 싸고, 시설의 유지관리, 주정의 반입출,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상당한 점유면적이 필요하며 육외라는 조건에서 주정의 보수, 관리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피셔리너의 수용능력은 이 보트야드의 면적에 의하여 좌우되는 점이 크므로 주정의 대형화, 트레일러에 의한 육상반입정의 증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야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상보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는 상가시설과의 위치관계에서 안전성,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4.7 기타시설

급유시설은 박지에 면한 육역의 일부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보정이나 방문객이 이용하기 쉽도록 배치한다.

도로와 주차장은 차의 움직임과 시설의 이용자나 육상보관하는 유어선 등의 움직임이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2.5 피셔리너 계획 예

피셔리너는 어항이용 조정사업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계획 정비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계획의 수립 예를 제시한다.

2.5.1 입지조건

A어항은 동해쪽의 외양파가 진입하기 어려으므로 해상조건이 좋은 위치에 있고,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로우며 해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저질은 사질토이다.

2.5.2 레크리에이션의 현황

이 지역은 비교적 정온한 수역으로서 양호한 자연해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크로징이나 윈드서핑 등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근래에는 어항 앞바다에 오징어 어장이 있어 유어선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매년 방문하는 해변 레저인파는 22만명에 달하고, A어항을 갖고 있는 B시로서도 해변캠프장과 해수욕장의 정비를 도모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어, 윈드서핑, 크루징 등의 거점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실이 있었고, 피해발생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피해구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구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환경오염분쟁 조정제도이다.

구체적 분쟁조정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재정등 3가지 방법이 있고 분쟁조정을 담당할 기관으로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시 도에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상설)

· 재정사건

· 2인이상의 시·도에 관련된 분쟁사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송사건

· 심사관이 알선, 조정을 신청한 사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비상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下)

환경오염분쟁조정제도는 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

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도 1일 발생량이 300kg이상이면 다량 배출자로 분류하고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모든 국민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종이·유리 등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상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규제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음식점, 목욕탕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시장·군수, 특정폐기물은 배출자

4.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